

# 한국전쟁과 트라우마의 치유 방안

## - 『한국전쟁과 분단의 트라우마』를 중심으로 -

전갑생(한국제노사이드연구회)

1. 머리말
2. 전쟁 트라우마-‘예외상태’의 굴레
3. 빨갱이와 반공의 트라우마- ‘예외상태’의 확산
4. 분단과 트라우마의 재생산과 치유방안
5. 맺음말

‘규칙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예외로부터 철수하는 가운데 예외에 적용된다’(Giorgio Aggamben, 『Homo Sacer』, 1995)

### 1. 머리말

한국전쟁의 체험자(전쟁세대)는 사실을 바라 본 오감과 주어진 환경조건에 따라 정치·사회·경제·문화적 편차를 겪는다. 전후세대는 체험자의 구술과 기억을 바탕으로 재생산의 도구로 활용되고 확산의 증인이 된다.<sup>1)</sup>

이 과정에서 후자는 전자의 증폭된 사실의 체현자로서 압도당할 수 있다. 전자는 그 영향력 혹은 권위를 정부나 여러 매개체로부터 도움 또는 지원받아 왔다. 다시 말해 전쟁세대는 국가의 홍보수단이나 권력에 추앙하지 않으면 삶을 영위할 수 없도록 제도적 틀에 갇혀 있었다. 즉 이들 세대는 국가의 또 다른 아바타(Avatar)가 되어야 했다.<sup>2)</sup>

1950~1953년 짧은 3년 동안의 전쟁은 개개인의 인성과 살아온 환경과 무관하게 이분법적 틀에 끼워져 투쟁을 전개하는 마당(場)이었다.

전쟁은 “아주 직접적으로, 그리고 강탈적인 폭력으로서 그것의 목적을 지향”하는 활동이다. 국가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외상태’의 법적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무소불위의 폭력을 감행하였다.<sup>3)</sup> 일반적인 전쟁의 목적은 제3국의 영토점령과 문화이식 등 다양한 결과를

1) 이들의 분담은 경험의 확산을 이끌어낸다. 즉 폭력에 대한 기억은 직접 경험자와 간접 경험자에 따라 정신적·육체적 발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자는 폭력의 전 영역에서 경험적 우위를 갖는다. 후자는 폭력의 도그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발터 벤야민 지음·최성만 옮김, 『폭력비판을 위하여』 (1921) 『발터 벤야민 선집』 5, 도서출발 길, 2008, 93쪽).

2) 전후세대는 전쟁세대의 후일담을 듣고 영웅적인 정사나 야사를 학습하는 간접적 경험을 바탕으로 Avatar가 될 수 있다. 이 Avatar는 전쟁세대의 체험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3) 예외상태의 법적 제도는 1791년 프랑스의 계엄법에서 기원하였다. 독일의 바이마르헌법과 이탈리아의 긴급조치 등이 해당된다. 일제는 1941년 국방보안법을 제정하면서 프랑스 간첩처벌법, 독일형법, 이탈리아 형법, 영

얻고자 수행된다.<sup>4)</sup>

한국전쟁시기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였다.<sup>5)</sup> 필자는 한국전쟁이 대외적 요인과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외적인 요인으로 20세기 제국의 리더이던 미·영·프 등은 동아시아 지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소의 확장력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었다. 두 세력의 확장은 한국전쟁이라는 ‘국지전 같은 국제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sup>6)</sup> 이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수행 목적과 더불어 외부로부터 전개된 공산주의 확산을 막고자 벌인 사상적 투쟁의 부산물에 가까웠다.<sup>7)</sup>

내부적인 요인으로 ‘조선인민’들은 일제강점기의 전시체제에서 방공방첩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 형성된 반공이데올로기와 공산주의를 비롯한 사상적 투쟁을 체득하였다.<sup>8)</sup> 인민들은 사상전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였으며 해방 후 그 체험 속에서 식민지와 단절되지 않는 투쟁을 이어가게 되었다. 남북의 정부는 영토 확장과 이념의 확산을 가속화시키고자 하였다.

한국사회의 정치 이념적 집단(좌우익)과 행정체계의 공동체(시·군·읍·면·리·자연마을)는 전쟁 수행의 객체가 아니라 폭력을 양산하는 주체가 되었다.<sup>9)</sup> 이들 구성원은 국가로부터 명령 또는 지휘를 받아 폭력적 지배자에 순응하지 않으면 배제될 수 있다는 ‘비국민’의 불안감을 체험하게 되었다. 결국 전쟁세대는 트라우마(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라는 정신적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숙제를 전후세대에게 전이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런 전쟁의 트라우마는 한국사회의 핵심적인 담론이 되었고 사회구성체들 간의 갈등이나 폭력을 유발시켰고 미해결로 남아 있다.

한국전쟁의 트라우마 해소방안에 대하여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김종균은 속초 지역의 전쟁 체험자들의 구술을 통하여 트라우마를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치유에 대하여 “분단

---

국 기밀보호법, 미국 간첩취체법 및 군기보호법, 소련 비밀유지에 관한 법규 등 예외상태의 법률을 검토·분석하였다. 이 법률은 일본의 육군형법, 조선의 치안유지법 등 10여 개의 법률을 통합한 것으로, 해방 후 한국의 국방경비법(일본 육군형법)과 국가보안법 제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조르조 아감벤 지음·김향 옮김, 『예외상태』, 새물결, 2009, 21~35쪽; 大竹武七郎, 『國防保安法』, 羽田書店, 1943, 16~60쪽; 國防部, 『韓國戰爭史-解放과 建軍-』 1, 1967, 346~356쪽).

4) 20세기 세계 여러 제국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유사한 경험을 하거나 폭력을 감행하였다. 그 결과로 뿌리 깊은 내전이나 냉전을 겪어야 했다. 니얼 피거슨은 20세기 여러 제국들은 식민지 확장과 내전 등을 겪으면서 타민족의 문화 등을 이식하는데 열중했다고 말하고 있다(니얼 피거슨·이현주 옮김, 『중오의 세기』, 2010, 민음사).

5) 전갑생, 『한국전쟁과 분단의 트라우마』, 도서출판 선인, 2011.

6) “Daily Report” 1, 1950. 6. 27; 『한국전쟁 자료총서』 16, 3쪽; “Records of the 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1950. 10. 9; 『한국전쟁 자료총서』 49, 365쪽.

7) 일본을 점령한 미군은 소련과 중국의 남하 정책(공산주의 확산)에 우려하여 필연적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고 천명하기도 하였다. 요시다(吉田) 내각은 공무원 중 공산주의자 배제와 일본 공산당을 비롯한 제일조선인 중의 공산주의자들을 탄압하였다. GHQ는 요시다 내각의 후견인이자 정책입안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미국은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반공전선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전 같은 국제전’에 나서야 하였다(C.A. 윌로비어著 延禎監 平塚絳緒編 『GHQ知られざる諜報戦-新版・ウィロビー回顧録』 山川出版社, 2011; Trent A. Pickering, *A Nuclear Dilemma--Korean War Deja Vu, USAWC STRATEGY RESEARCH PROJECT(2006)*; Evgueni Bajanov, "Assessing the Politics of the Korean War, 1949-51," *Bulletin of the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6/7 (1995)).

8) 『毎日新報』는 1937년 중일전쟁 이후 간첩(五列·스파이)이나 공산주의 박멸 등의 기사를 흥미위주로 게재하였다. 일제는 전시체제 내에서 반공방공교육을 중요한 사업의 일환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권명아, 「여자 스파이단의 신화와 ‘좋은 일본인’되기-황민화와 국민방첩 이데올로기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東方學志』 130,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5 참조.

9) 박찬승은 진도 등의 동쪽 마을과 기존의 양반 가문으로 구성된 전통 마을인 전남 영암과 금산군 부리면 지역이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기까지 서로 갈등과 학살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정리하였다. 한국전쟁은 정치집단과 동족끼리 이념이라는 틀에서 분열하고 융합하는 시기였다(박찬승, 『마을로 간 한국전쟁』, 돌베개, 2010 참조).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트라우마 실체에 대해 자각하고,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보았다.<sup>10)</sup>

최정기는 5.18광주민중항쟁의 피해자들을 면접 조사한 결과에 따라 보상과 기념사업보다 개개인의 환경, 학력, 경제능력 등을 파악하여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sup>11)</sup> 유재춘은 전쟁의 트라우마 치료에 대하여 역사학과 여러 학문이 결합된 인문치료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sup>12)</sup> 그 외 김귀옥은 강화도에서 발생한 대량학살에서 어떻게 트라우마가 지속되는지를 파악하였다.<sup>13)</sup>

본 글은 『한국전쟁과 분단의 트라우마』에서 제기한 여러 트라우마들을 어떻게 해소 혹은 치유할 것인지를 고민해보고자 던지는 질문이다.

한국전쟁은 치열한 전투보다 내부로부터 자행된 폭력과 학살, ‘국민의 비국민화’, 재일조선인의 빨갱이 만들기, 포로수용소 내의 폭력과 사상적 투쟁, 해방 직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간첩(第五列) 등을 양산한 사건이었다.

이런 여러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방관자와 제3자에게 트라우마를 전이시켰다. 그럼 21세기에 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전쟁·빨갱이·분단의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을지 그 돌파구를 찾아보고자 한다.

## 2. 전쟁 트라우마- ‘예외상태’의 글레

과거의 전쟁은 현재에도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고대부터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전쟁을 겪었다. 그 여러 전쟁 중 한국전쟁은 전후세대와 전쟁 미 체험자들이 공존하고 있는 현 시대에도 트라우마의 재생산과 증폭을 불러오고 있다. 현재 남북한은 전쟁 혹은 국지전에 대하여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전쟁의 공포는 “경찰력의 확대와 법적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예외상태로 빠져 들게 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인간의 이성보다 감성을 높여 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만든다.<sup>14)</sup>

『한국전쟁과 분단의 트라우마』 제1·2부에는 이승만 정권에 의해 ‘빨갱이’로 지목되어 죽음에 내몰린 부산 전평 노동자와 보도연맹 학살사건, 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심도 보도연맹원 학살사건, 전쟁 중 자행된 부역자들의 처형, 쓰시마(對馬島)로 밀항한 사람들과 섬 내에 거주하던 재일조선인 문제, 미국과 일본의 재일조선인 좌우 분리공작 등을 다루고 있다.

반공국가 수립 초기에 발생한 이 사건들은 ‘국민’이지만 ‘비국민’으로 분리되어 예외상태에 놓여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다.<sup>15)</sup>

국민보도연맹원 학살사건은 1989년부터 2010년까지 학자, 언론사 민간단체 등의 노력에

10) 김종균, 「구술을 통해 본 분단 트라우마의 실체」 『통일인문학논총』 제51집,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1. 5 참조.

11) 최정기, 「국가폭력과 트라우마의 발생기제」 『경제와 사회』 통권 제77호, 비판사회학회, 2008. 3. 참조.

12) 유재춘, 「인문치료학에서 역사학의 역할」 『인문과학연구』 제26집, 2010. 9 참조.

13) 김귀옥, 「한국전쟁기 강화도에서의 대량학살사건과 트라우마」 『체노사이드연구』 제3호, 한국체노사이드연구회, 2008. 2. 그 외 한국전쟁과 관련한 트라우마의 실체와 발생 원인 등을 언급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이명자, 「전쟁 경험의 재구성을 통한 국가 만들기」 『통일문제연구』 제23권 2호(통권 제56호), 2011. 11 ; 한미순, 「주변부의 역사 기억과 망각을 위한 제의」 『한국민족문화』 제38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0. 11 ; 김장원, 「전쟁 상처의 잔혹성과 상처치유의 가능성」 『국제어문』 제35집, 국제어문학회, 2005. 12.

14) Giorgio Agamben, “Homo Sacer”, 1995, PP. 30~50.

15) 본 글에서 언급한 사건은 『한국전쟁과 분단의 트라우마』에 나와 있으며 별도의 각주를 생략한다.

의해 진상이 발굴되었고 그 결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를 거쳐 국가로부터 일부 진실규명결정을 받았다. 학살의 주체는 이승만을 비롯한 군·경·우익단체로 지목되었고 거기에 미군이 개입한 증거까지 나왔다. 하지만 미해결된 사건과 밝혀지지 못한 사건은 학자들의 과제로 남아 있다.<sup>16)</sup>

보도연맹원의 여러 사건 중 유일하게 전평 출신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된 사건은 부산의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보도연맹원 사건이다.<sup>17)</sup> 이들 전평 노동자들은 해군특무대와 영도경찰서, 부산철도경찰대 등에 의해 조직적으로 학살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대한조선공사 노동자들의 학살과 부산형무소에 수감된 보도연맹원 등이 학살되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학살 인원과 가해자, 학살과정 등을 철저히 규명하지는 못하였다.<sup>18)</sup>

진실화해위원회는 기무사로부터 받은 해군특무대 문서에서 대한조선공사의 노동자들이 경찰서 등에 수감되었다는 사실을 일부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언제 학살되었는지, 구체적인 인원이 몇 명인지 확인하는데 실패하였다.<sup>19)</sup>

그 원인은 기무사의 문서 파기와 가해자나 피해자들의 증언 부족에서 기인하였다. 필자는 여러 피해자와 가해자들을 발굴하여 대한조선공사 노동자들의 학살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대한조선공사 노동자들이 김종원에 의해 청사포에서 학살된 사실을 밝혀냈다.

부산형무소 재소자 학살 사건은 보도연맹원과 사상범(정치범)들이 부산과 쓰시마 인근에서 수장된 사건이었다. 필자는 부산형무소의 기록물 일체를 수집하여 정리하여 그 사실을 밝혀내고자 했다.<sup>20)</sup>

거제 지심도에서 벌어진 학살은 보도연맹원 학살사건의 결정체다. 이 사건은 보도연맹원 예비검속, 분류(ABCD 혹은 갑을병), 학살(군경우익단체)이라는 과정을 가지고 있다. 또한 1950년 5.30선거의 승자와 패자 간의 감정대립 또는 음모에서 불거진 감정적인 학살, 우익-우익간의 정치적 대립에 의한 학살, 재산 탈취와 정적 제거를 위한 비상시국대책위원회의 사익(私益)적 학살까지 포함된 사건이 지심도 학살 사건에 녹아 있다.<sup>21)</sup>

또한 1950년 9.28수복 이후 인민군 점령지에서 발생한 부역자들은 간첩(第五列)이라는 죄명으로 학살되었다. 정부는 기존의 법체계를 무력화 시키고 예외상태의 법(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이하 특조령)을 적용하여 무자비하게 대량의 부역자들을 양산하였다. 대다수의 부역자들은 단심제에 걸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들 부역자들은 인민군이나 인민위원회 등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대규모로 검거되고 간첩(第五列)과 동일시하여 처벌을 받았다. 이승만은 전쟁과정에도 부역자들을 서둘러 사형집행하여 민심을 수습한다고 했으나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

16) 진실화해위원회는 2005년 12월 1일~2006년 11월 30일까지 2,569명의 진실규명신청서를 접수 받아 직권 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족들은 신청기간의 문제, 홍보 미비 등으로 제때 신청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직권 조사 이후 경남북과 전남북 등에서 새로운 사건이 추가로 발굴되었으나 직권조사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일부 유족들은 정부의 추가 보복이 두려워 신청마저 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였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7권, 2010 참조).

17) 전평 조직 산하의 보도연맹원 조직은 경성전기 보도연맹 분구(이하 경전) 외에 확인되지 않았다. 경전은 전쟁 직후 대부분 남하하거나 별도의 학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전갑생, 「부산지역 全諺 소속 보도연맹 연구」 『역사연구』 제20호, 역사학연구소, 2011년 6월, 210~229쪽 참조).

1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3권, 2009 ;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5권, 2010 참조.

19)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부산경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위의 책 3권, 2009.

20) 진실화해위원회는 재소자의 인원표 등을 확인하여 학살 사건을 파악했으나, 부산형무소 간수들의 증언이나 내부 자료는 제대로 열람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였다.

21) 유사한 사례는 김해 진영사건을 비롯한 여러 사건에서 확인된다.

일부 판사나 검사들은 이승만의 사형 집행의 근거로 내세운 특조령을 문제제기하고 국방 경비법이나 국가보안법마저 무력화시키는 초법에 항의하기도 했다.

쓰시마(對馬島)로 밀항한 사람들과 섬 내에 거주하던 재일조선인 문제는 미국과 일본의 재일조선인 좌우 분리공작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해방 직후 재일조선인들은 '조선적'을 획득한 한국인이었다. 그러나 일본 내의 조련 계열의 조선인들은 일본공산당과 북한과 연계된 공산주의자들로 지목되어 강제추방의 대상이었다.

쓰시마의 재일조선인들은 그 섬의 경제권을 쥐고 있었다. 목탄업에 종사하던 재일조선인들은 일시 조선으로의 귀환과 일본정부의 탄압 등으로 본토(후쿠오카 등지)로 이주함에 따라 쓰시마의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 그 결과 쓰시마 인구는 최대 100,000명이었던 것이 현재 35,000여 명으로 급감하고 말았다.

또한 한국전쟁 중 군인, 경제인, 일반인 등은 전쟁을 피해 쓰시마를 거쳐 본토로 피난 혹은 도망을 쳤다. 그 대표적인 인물은 박흥식이었다. 그리고 일부 연예인들은 쓰시마를 거쳐 일본에서 도착하자 경찰에 체포돼 재소환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쓰시마는 '밀항의 섬'으로 악명을 떨쳤고 전후 밀수의 섬, 간첩의 섬으로 지칭되었다.<sup>22)</sup>

'제2부, 절멸의 수용소, 반공의 탄생'은 또 하나의 거대한 전쟁으로 불리지는 전쟁포로수용소 내의 학살을 다루고 있다. 반공포로의 조직과정, 왜곡된 포로수용소의 사건들, 제3국으로 떠난 포로들의 행적을 조사하였다. 특히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반공포로 조직 과정을 정리하였다.

이외에도 전쟁 피난민들의 분리정책에 따른 한·미군의 학살, 공중폭격으로 인한 민간인 학살, 한·미군의 여성 및 아이들에 대한 강간 및 살인 등이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전쟁을 겪은 세대와 전후세대에게 트라우마의 발생 원인이자 기제로 작용하였다.

### 3. 빨갱이와 반공의 트라우마- '예외상태'의 확산

『한국전쟁과 분단의 트라우마』가 다루고 있는 한국전쟁 기간 중의 여러 사건들 - 국민 보도연맹원 학살, 사형수로 끌려간 부역자, 재일조선인 강제추방과 좌우분리작전, 포로수용소 사건, 전쟁 중의 간첩 사건- 등은 하나의 단어로 함축될 수 있다. 빨갱이와 반공이라는 두 단어가 생성되어 트라우마로 작용하였다.

이 단어의 생명력은 6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원래 빨갱이(Commie, Red 혹은 赤色分子)란 '공산주의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었으나 현재 한국사회에서 여기저기 사용되고 있다.<sup>23)</sup>

이 단어와 공생하는 단어, 반공(反共, anticommunism)은 61년 전과 현재가 동일선상에 있다는 기시감(既視感, Déjà Vu)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이승만을 비롯한 과거 정권은 빨갱이와 반공이라는 두 단어를, 대량학살과 반인권적 폭력으로 시민사회를 위협하는데 적절하게 이용해 왔다. 이러한 이분법적 이데올로기 행위는 전쟁을 경험한 1세대와 조우해 또 다른 트라우마 세대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들 세대는 신세대와 웹2.0세대를 온오프라인(on-off

22) 한국전쟁 중 쓰시마는 간첩들이 접선하는 섬으로 지목되었다. 일본정부는 미군 헌병 파견소를 설치하고 재일 조선인과 연계된 북한 인민군 출신자들을 검거하거나 조련 계열의 조선인을 간첩이라고 체포하기도 하였다 (『對馬新聞』, 1951. 4. 8; 齋藤準人, 『前後對馬三十年史』, 對馬新聞社, 1983 참조).

23) 일례로 전교조 소속 교사를 '빨갱이 선생', 생존권 투쟁에 나선 노동자도 '빨갱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그림이나 글을 쓰는 누리꾼도 '빨갱이 새끼', 지난 미국 소고기 촛불 시위에 참여한 학생과 시민들까지 '빨갱이'로 불렸다. 이미 유물로 인식된 1950년 매카시즘(McCarthyism)은 한국에서 다양하게 변화발전해 오고 있다.

line)까지 장악해 새로운 매카시즘을 전파하려고 각종 악법과 정책을 양산하고 있다.

한국전쟁 직후 정치권을 비롯해 문화예술분야에서 반공의 기치는 여러 간첩단 사건과 작품들을 생산하였다.

사상검사 오제도도 간첩에 대하여 “人工衛星보다 무서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sup>24)</sup> 그와 김창룡을 비롯한 특무대 등은 1953년 7월 27일 휴전 직후부터 8월까지 간첩사건이 149건이고 349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하였다.<sup>25)</sup> 김창룡 특무대장은 1953년 9월 18일부터 매월 ‘전국 방첩강조주간’을 설정했고 특무대가 이를 직접 지휘하였다. 전국 시·도·군·읍·면의 초중고대학교, 직장 등에서 글짓기, 포스터, 표어, 가장행렬(국회프락치 사건의 피고인, 김수임 등으로 변장)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다.<sup>26)</sup>

1955년 4월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 김광섭(金光燮)은 “문화정책의 산물은 반공을 국시로 하면서 공산정치세력과 종합한 좌익문화전선에 대항하는 것이다”라고 신문에 기고하였다.<sup>27)</sup> 그는 1956년 7월 일본에서 개최된 제28차 국제펜클럽 세계대회에 한국대표로 참석한 자리에서 “이번 대회에 가서 우리가 들고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싸운 것은 우리나라가 역사상 처음”이라고 강조하고 반공과 관련된 “작품들을 생산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sup>28)</sup>

또한 1956년 1월 소설가 박종화는 시인 김팔봉과 한 일간지의 신춘대담 자리에서 자유문학자협회의 발기대회를 지켜보면서 “문협이나 자유문학자협회는 8.15해방 후에 반공투쟁하기 위해서 민족적으로 결속되어 있는 대외적 존재였다”고 문화예술인들이 반공전선의 투쟁가임을 자임하였다.<sup>29)</sup>

1953년 자유문학상 제정 이후 서울시문화상, 학술원 학원상 등은 반공작품에 국한하여 대거 수상자가 탄생하기도 하였다.<sup>30)</sup> 영화 부문에서는 간첩 잡는 아이들을 다룬 「창수만세」(1954, 감독 어약선), 북한의 스파이로 활약하는 술집 여자가 활약하는 「운명의 손」(1954, 한형모) 등이 반공방첩 계몽성을 전달하고자 제작되었다.<sup>31)</sup> 이처럼 한국사회는 반공과 빨갱이에 대하여 트라우마가 확산·재생산되는 구조였다.

#### 4. 분단과 트라우라의 재생산과 치유방안 모색

‘제3부, 전쟁과 간첩 그리고 조작’ 편은 CIC(방첩대→특무대)의 간첩조작사건을 다루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전시체제기(1937~1945)부터 한국전쟁 시기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몇 개의 단어가 있다. 그 중에서도 정치·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켜 일반대중들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이용된 단어는 간첩, 제오열(第五列), 부역자, 공산주의, 반공 등이다.

第五列(Quinta Columna, Fifth Column)<sup>32)</sup>은 사전적으로 내부에 있으면서도 외부의 반대

24) 오제도, 「공산간첩을 전멸하자」 『국회보』 15, 국회사무처, 1957. 11, 130쪽.

25) 「傀儡間諜 逮捕 8月 中에 349名」 『東亞日報』, 1953. 9. 10.

26) 「間諜에는 休戰없다 總力으로 막아내자」 『東亞日報』, 1953. 9. 19.

27) 「文化政策과 그産物」 『東亞日報』, 1955. 4. 18.

28) 「국제펜·클럽 28차 세계대회 참가대표(3) 좌담회」 『京郷新聞』, 1956. 7. 3.

29) 「丙申年의 文學·文壇 朴鍾和氏 金八峰氏 新春對談」 『東亞日報』, 1956. 1. 5.

30) 「올바른 선출을 각종 학·예술상대상자」 『東亞日報』, 1958. 1. 21. 또한 『思想界』(1953년), 『現代文學』(1955년), 『自由文學』(1956) 등은 반공문학작품을 대거 게재하여 반공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는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김준현, 『전후 문학 장의 형성과 문예지』,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참조).

31)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http://www.kmdb.or.kr>) 참조.

세력에 호응하여 활동하고 있는 집단을 일컫고 간첩과 같은 말이다.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일본 내의 공산주의자나 조선인 공산주의자, 중국 공산당(팔로군)·소련·미국과 연계된 간첩(第五列·스파이)을 경계하도록 선전하고, 조선총독부 기관지 『每日新報』나 『朝光』 잡지에 ‘스파이의 신화’ 등을 소개하면서 일반 민중에 대한 반공·방첩훈련을 강화시키는 도구로 활용하였다.<sup>33)</sup>

더 나아가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1941년 3월 6일 일제는 국방보안법을 공포하여 신문에 상세한 범조항을 게재하고 간첩을 신고하는 아이들을 소개하는 등 반공교육을 강화시켜 충실한 ‘황국신민’ 또는 ‘새로운 국민’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sup>34)</sup>

이렇게 일제로부터 반공·방첩교육을 받은 친일·친미 정치세력들은 해방공간에서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 등을 경험하면서 공산주의 사상의 확산을 목격하게 되었다. 또한 일반대중들은 이승만 등의 우익 정치세력과 미군정의 정책에 맞서 반감을 갖게 되었다.

남한 정부수립 직후 위기감을 느낀 이승만 정부는 국방보안법을 모방하여 국방경비법(1948. 8. 4)과 국가보안법(1948. 12. 1)을 제정하여 간첩과 공산주의를 타파하고 극우반공체제를 수립하고자 하였다.<sup>35)</sup> 이 두 법의 제정 이후 이승만 정부는 간첩과 공산주의자들을 적으로 간주하거나 전향공작을 실시하였다.<sup>36)</sup>

또한 연일 신문은 1면이나 사회면 톱에 전향자가 속출한다고 보도하거나 북한의 간첩이 체포되었다는 기사로 도배되면서 반공교육의 메신저 역할을 담당하였다.<sup>37)</sup> 이런 간첩사건은 남한의 선거 등 주요 정치일정과 맞물려 터져나왔다.<sup>38)</sup>

이승만 정부는 초기 국가수립 과정에서 반공을 국시로 삼으면서 간첩을 추종하거나 지지한다는 것은 공산주의자이고 ‘괴뢰집단에 호응하는 반역자’라고 지목하고 ‘처단의 대상’이라고 거듭 밝혔다.<sup>39)</sup>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군·경은 간첩보다 남하하는 북한군을 ‘격퇴’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인천상륙 작전 후 이승만 정부는 서울 수복과 동시에 진행된 부역자 처벌과 후방에 ‘암약’하는 간첩들을 막는다는 이유로 ‘대간첩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sup>40)</sup> 부역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간첩이나 오열과 같이 적으로 간주되었다. 한국전쟁기는 그야말로 간첩의 ‘전성시대’였다.<sup>41)</sup>

32) 제5부대라고도 한다. 1936년의 에스파나내란 당시, 4개 부대를 이끌고 마드리드 공략작전을 지휘한 E.몰라장군이 “마드리드는 내응자(內應者)로 구성된 제5부대에 의해서 점령될 것이다”라고 하여, 자기 부대 이외에도 협력자가 있음을 시사한 데에서 유래되었다. 평시에도 상대국의 내부에 잠입해서 모략공작을 하는 자, 즉 간첩에 대해서도 넓은 의미로 제5열이라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나 체코에 거주하던 독일계 주민들은 자위단을 조직해 독일군과 전투를 벌인 사례가 있다. 미국은 재미 일본인들이 일본군의 제5열로 이적활동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용소에 격리하기도 했다(『第五列』 『每日新報』, 1943. 8. 27.

33) 『每日新報』, 1938. 7. 22, 12. 1, 1940. 1. 5·9. 7, 1942. 2. 1.

34) 「국방보안법 해설」, 「국민방첩이야기」 『每日新報』, 1942. 6. 23. 이 신문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의심가는 청년을 신고해 표창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가특한 소년들 스파이 嫌疑 怪漢逮捕」 『每日新報』, 1941. 7. 16). 이런 사례는 1960, 70년대 한국사회에서 강풍처럼 일어난 간첩신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

35)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2, 역사비평사, 1996 참조.

36) 이승만 정권은 1949년 11월 과거 좌익단체 등에 가입하여 간부나 좌익성향의 단체의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국민보도연맹을 조직하여 “애국자”로 전향시켜 특별관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전쟁발발 직후 정부는 약 20만 명 이상의 보도연맹원들을 집단학살하였다.

37) 임종명, 「해방 공간의 스파이 이야기와 정치적 함의」 『역사학연구』 제41집, 호남사학회, 2011 참조.

38) 주요 사례는 1949년 여간첩 김수임 사건과 일명 국제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진 국회프락치 사건이다. 김수임 사건은 대중들로부터 흥미를 유발시킬 소재였다. 또 국회프락치 사건은 이승만과 반대파의 정적을 제거하는 도구로 이용된 조작사건이었다.

39) 「反逆行爲者嚴斷」 『東亞日報』, 1950. 10. 12.

40) 國軍保安司令部, 『對共三十年史』, 1978, 114~116쪽.

1954년 이후 한국사회는 간첩 잡기에 혈안이 되었다. 언론을 막론하고 문화예술인 등을 동원하여 시나 소설들이 양산되었다.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 표어, 웅변대회 등으로 반공과 간첩 잡기라는 프로그램에 매몰되었다.

이런 국가의 시책은 ‘반공의 국시’라는 모토아래 전쟁과 빨갱이 트라우마를 증폭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1948년 두 국가 체제가 시작된 이후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는 분단체제를 청산하고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다. 분단 트라우마는 전쟁, 빨갱이, 반공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극복될 수 있다. 뿌리 깊은 갈등과 불안은 정권이 바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전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북한을 방문하고 여러 선언과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낸 것을 큰 성과로 자부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모든 정책은 과거로 회귀했고, 우리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전쟁 중 여러 사건과 연계된 트라우마는 어떻게 해소하고 치유할 수 있을까. 『한국전쟁과 분단의 트라우마』에 나온 여러 사건은 현재진행형이거나 전후세대에 의해 재생산되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정치·사회·교육·문화 각 분야에 영향력을 주고 있다.

치유방법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트라우마는 정신적 질병이라는 인식하에 폭넓은 치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다음 몇 가지의 문제점과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1) 개인의 트라우마 치유 방안

한국 사회에서 전쟁세대는 연령에 따라 산출한다면 1920년대 출생자(현 92~83세, 한국전쟁기 30~21세), 1930~1945년 출생자(현 82~67세, 한국전쟁기 20~8세)들이 해당될 수 있다. 이들은 1950~1953년 사이 학살과 전투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체득하였고 전후세대로의 트라우마를 전이하는데 중추적인 세대라고 하겠다.

일례로 1951년 1월 거창·산청·함양 지역의 민간인 학살 사건을 경험한 여성들은 정신적인 고통과 악몽 등에 시달리고 있다.<sup>42)</sup> 또한 1960년대 민간인 학살 사건 유족회에서 활동한 일부 유족들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진실규명신청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기도 하였다. 다시금 정부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처럼 피해자들의 개개인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 치유의 방안은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트라우마는 정신질환이라는 인식에서 시작되는 치유방안이 필요하다. 김종균은 트라우마 치유에 대하여 “트라우마 실체에 대해 자각하고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치유의 길을 찾는 첫 걸음”이라고 전제하고 “고통이 가해지면 아파할 줄 알고, 그 아픔의 원인을 파고드는 가운데 치유의 길은 찾아진다”고 해법을 제시하였다.<sup>43)</sup>

최근 5.18기념재단과 (사)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는 2011년 10월부터 5.18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행사는 5·18 피해자 5~10명을 선정해 매주 한 차례(1~2시간)씩 모두 10회에 걸쳐 심리 치료에 나섰다.<sup>44)</sup> 평화재단 측의 심리치

41) 특무대는 1953년 4월 10일 대구의과대학교 제2강당에서 개최된 파견특무대장회의 석상에 제출된 1952년도 업무성과보고에서, 4,990건의 각종 간첩사건을 취급했으며 1951년 476명, 1952년 364명, 1953년 290명 총 1,130명의 간첩을 체포했다고 발표하였다(國軍保安司令部, 『對共三十年史』, 1978, 122~123쪽).

42) 전갑생, 「한국전쟁전후 산청·함양 지역의 사회변동과 군경토벌 사건」 『산청·함양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60주년 학술대회』, 2011. 8. 31. 필자와 안김정애(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 등과 함께 이 유족회의 여성 유족들을 대상으로 트라우마에 대하여 3개월 간 구술 작업을 벌였다.

43) 김종균, 앞의 논문, 2011. 5, 60~61쪽.



료 외에도 병원이나 연구소 등이 음악, 영화 등을 이용하여 일반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는 타 학문과 연계된 심리치료가 필요하다. 인문치료(Humanities Therapy)의 사례가 있다. 유재춘은 베이컨이 제시하는 인문치료의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베이컨은 “학문이 마음의 온갖 질병에 대해 제공하는 치료제는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지경”<sup>45)</sup>이라면서 학문을 이용한 트라우마의 치유를 제시하고 있다. 인문치료는 역사학이 타 학문과 결합했을 때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sup>46)</sup>

학문의 치료 방안은 문학을 비롯하여 철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와 교류하면서 생산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 2) 집단의 트라우마 치유방안

국가는 한국전쟁기 자행한 폭력과 학살 등의 책임을 지고 국가 차원에서 보상과 위령사업, 기념사업 등을 펼쳐야 한다. 국방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에서 시작한 진상규명작업은 2006년 진실화해위원회로 이어졌다. 이 위원회들은 간첩조작 사건, 민간인 학살, 인권침해 등 각 분야에서 국가 폭력이 저지른 사건들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 초점을 두고 활동해 왔다.

하지만 이 위원회는 후속 조치(보상 및 재단 설립)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회성이라는 문제점을 남기고 말았다.

그럼 국가차원에서 트라우마 치유방안은 어떻게 있는지 몇 가지의 사례와 함께 살펴보자. 첫째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가해자 처벌문제이다. 1980년 신군부 전두환 등이 자행한 광주민중항쟁의 진실규명과 보상 등을 5.18재단이 진행하고 있다. 또한 김영삼 정부 시절 전두환·노태우 등을 재판에 회부하여 가해자 처벌에 나서기도 하였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 두 피고인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을 사면복권하면서 화해적인 조치를 단행하였다.

정부는 5.18재단에 트라우마 치유와 관련하여 “1990년 보상과 기념사업의 논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 선정과 보상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나 제주4.3항쟁, 거창·산청·함양 민간인 학살 사건의 보상 및 기념사업, 노근리 사건 등이 비슷한 범주에 들어간다.

최정기는 국가의 보상이나 기념사업 등이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자체가 해소된다고 볼 수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sup>47)</sup> 또한 개인의 학력과 사회운동 경력,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트라우마가 편차를 보인다고 판단하였다.<sup>48)</sup>

5.18민중항쟁과 거창·산청·함양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은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의 두 사건은 가해자 처벌이 정치적 문제를 고려하여 소극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둘째는 한국전쟁 중의 사건을 해결하고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독립적인 재단이 필요하다.

44) 「끝나지 않은 고통... 5·18 트라우마 치유 나선다」 『한겨레』, 2011. 6. 1. 치료는 심리학자 등 전문가 2명이 참여하며, 피해자와 대화를 통한 심리상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평화박물관은 피해자들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파악해 상황에 따라 예술(미술)치료방법을 선보였다.

45) 프란시스 베이컨 저·이종흡 옮김, 『학문의 진보』, 아카넷, 2002, 128쪽.

46) 유재춘, 앞의 논문, 2010. 9, 419~520쪽.

47) 최정기, 앞의 논문, 2008. 3, 74쪽.

48) 최정기, 앞의 논문, 75~76쪽. 보상의 문제는 미 신청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유족들 사이에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지난 진실화해위원회 이후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정부 보복의 우려와 홍보 부족 등으로 재판청구 및 보상에서 배제되고 말았다. 따라서 전쟁 중 국가범죄에 의해 학살 또는 피해를 입은 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된 재단이 필요하다. 이 재단은 미진한 사건의 진실규명, 향후 보상 및 위령사업, 개인 및 집단의 트라우마 치유에 대하여 각종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재단은 국가인권 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기구가 되어야 한다.<sup>49)</sup>

셋째는 정부가 ‘예외상태’의 무법적 행위를 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한국전쟁 시기 정부는 특조령 제정 과정에서 정식 절차를 무시하고 공포하였다. 특조령은 군사재판에서 단심제로 물증 증거보다 정황만으로 피고인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조범이었다.<sup>50)</sup> 계엄령은 예비검속(예방구금)과 고문 등을 허용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우익단체 등은 정부의 명령 또는 지시라는 미명아래 민간인을 집단학살하거나 피해자의 재산 등을 가로채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범적인 법령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령이나 조치가 필요하다.

넷째, 트라우마의 치유는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 반공체제와 분단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전후세대를 비롯한 미래의 자녀들을 위하여 새로운 역사 교육이 필요하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정부주도에 의해 시행된 역사교육은 반공체제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북한 정권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교육이었다. 전후세대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반공교육에서 트라우마의 재생산을 만들어왔다고 볼 수 있다.

언론이나 정치인을 비롯한 과거 정권들은 반공이데올로기 교육의 수혜자이며 현 체제를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섯째, 남북 분단 트라우마의 치유센터나 재단이 필요하다. 한국은 선거 때마다 정권교체기에 접어들면 다양한 분단해결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sup>51)</sup> 이산가족 찾기의 정례화, 개성공단의 확대, 금강산 관광의 재개, 식량지원, 민간교류 확대 등이 주요 정책이었다.

하지만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간교류 차원의 센터나 재단 등이 부족하다. 우리민족서로 돕기운동본부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의 민간단체는 식량 지원, 역사,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근본적인 남북한의 트라우마를 해소하는 자체 프로그램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단지 통일비용이나 인도적인 식량지원 등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분단의 트라우마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민간과 정부 등이 참여하고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분단 트라우마의 치유센터나 재단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이 센터는 민간교류와 재정 지원, 남북한 민간인의 재활교육, 문화교류 등을 포괄하고 독립적 기구로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 3) 해외의 사례방안

한국과 유사하게 전쟁이나 국내의 분쟁 등으로 피해를 입은 외국의 몇몇 국가는 진실화해

49) 현 정권 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식물인권위로 변색되었다고 비난을 받고 있다. 독립기구의 인사문제 등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리라 본다.

50) 김학재, 「비상사태하범죄처벌특별조치령의 형성과 성격」 『전쟁, 법, 민주주의-냉전의 극복과 전시법의 민주화를 위하여』, 한국제노사이드연구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공동 심포지움 자료집, 2009 참조.

51)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참여정부는 재정적 지원과 민간교류 등을 적극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민간교류와 재정지원을 비롯해 각 분야의 남북교류를 막고 있다. 하지만 2011년 말부터 현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정책기조가 예전과 달리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위원회와 같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여 후속 조치까지 실시하고 있다.<sup>52)</sup>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과거사와 관련한 위원회나 재단이 운영되는 곳은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독일, 이스라엘, 대만, 에스파냐 등이다. 이들 국가들은 피해자 보상 및 위령사업,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하는 재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재단은 국가기구로서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국가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트라우마의 치유사업과 관련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트라우마 센터(TCSVT)에 직원 99명이 고문 및 가혹행위 피해자들의 정신 심리적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관련된 활동가들은 개인 상담 또는 그룹 상담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그들의 존엄성을 되찾고 그들의 소중한 삶을 재활할 수 있도록 신체적·심리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sup>53)</sup>

대부분의 국가는 화해·위령사업, 기록·연구·교육사업(사료관, 스페인 역사기억문서보관소, 아르헨티나 국가기억자료보관소, 남아공의 국가기록원, 박물관), 조사·발굴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한국과 달리 국가가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재단이나 트라우마 치유센터 등을 설립하였다. 이들 위원회나 재단은 정부로부터 독립성과 통합성 등이 보장된 기구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sup>54)</sup>

## 5. 맺음말

복잡한 성격의 한국전쟁은 한국사회의 치명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발생했으며, 국제질서의 변화와 동아시아 지역의 변동과도 맞물려 표출되었다.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포로수용소 내의 학살, 비정규진의 학살 등이 발생하였다. 미국은 남한과 일본의 반공국가체제를 유지·확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민간인 학살에도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전쟁은 다양한 트라우마를 양산하였고 재생산과 확대로 이어졌다. 전쟁세대와 진 후세대는 이념의 트라우마(빨갱이·반공)의 이식과 전이자의 공생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정치인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들도 각 분야에서 반공이데올로기 확산에 참여하여 재생산의 기수가 되었다.

앞서 언급한 여러 트라우마의 치유방안은 여러 차례 시도되었거나 준비단계에 머물러 있다. 개인의 트라우마 치유는 피해자들이 이미 고통이며 만성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는 민간과 정부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또한 집단(국가)의 트라우마는 다른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후속조치에 따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현 시점에서 국민적 합의와 재원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전쟁이 잉태한 다양한 트라우마는 치유와 극복에 따라 분단을 해소할 수 있는 열쇠가 되리라고 본다.

52)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발전연구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화해·위령 및 과거사연구재단설립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009. 4. 10 참조.

53)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발전연구소, 위의 책, 224쪽. 이 센터는 1993년에 출범하였고 비정부 인권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54)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발전연구소, 위의 책, 219~223쪽.